



5면·16면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음 6월 10일)

제37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오직 국민’ 다짐으로 민생회복 전력투구

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 취임 30일 맞아

30조5000억 추경·G7 참석
3대 특검 등 5대 성과 달성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등
3가지 핵심 비전 집중 강조
검찰 개혁 강력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향후 4년 11개월간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달”이라고 회고하며,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국정을 이끌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 달간 5가지 핵심 성과를 통해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를 트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성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 점을 꼽았다. 취임 1호 지시로 비상 경제 점검 TF를 즉시 가동했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통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국제 무대에서의 국격 회복을 언급했다. G7 정상회의의 참석 등을 통해 민주 한국의 위상을 선포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혔으며, 특히 한미 통상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에 기반한 호혜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를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세 번째로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첫걸음으로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국민 목소리를 국정 의의로 삼았다고 약속했다.

네 번째 성과로는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의 시작을 들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재건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섯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통한 국민 일상의 안정을 언급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

을 야기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고리를 끊어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3가지 핵심 비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비전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기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처방을 총동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

업, 재생에너지, 문화 산업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여 기술 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비전은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리스 구축이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비전은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다. “죽

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했다.

검찰 개혁 속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점은 중회의를 통해 지역 옥천신문 기자와의 화상통화로 질문을 받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자들과도 격의 없이 직접 질문을 받으며 진솔한 의사를 밝혔다.

미국 기자와는 관세 협상 문제를 일본 기자와는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질문받아 대통령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인 4.5일제 시행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4.5일제로 가야 하나 그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해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직 국민’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이 대통령 취임 첫날 지명

재석 179명 중 173명 찬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해 가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6월 4일 지명한 인사로, 한 달 만에 인준을 받은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말 이틀간 열렸지만,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두고 야당의 반발로 마지막 날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정상 운영을 위해 인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임명동의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4선의 다선 의원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상임 최고위원으로 비상계엄을 예측하는 등 탁월한 정치감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내란 정국 극복에 기여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국정 통찰력과 통합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민생 회복의 책임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자치도의 산·학·연·관 일자리 협력 거버넌스가 대표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협력 강화와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관련사진 3면>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청년 인구 유출, 고용환경 변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

일자리 정책도 협치 시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지연 전주고용센터소장 등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대표 21명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거버넌스의 실행력 강화와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산·학·연·관 협의체로, 지역 산업 구조와 고용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2025년 전북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

고용 여건 변화 대응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 논의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표협의회에서는 기존 22개 참여기관에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분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협의체가 총 2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특히 두 기관은 지역 산업 특화 일자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일자리 거버넌스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전북 고용환경 변화 하에서 정책 개선방안 △청년 인구

유출 원인과 대응전략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정책 방향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고용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이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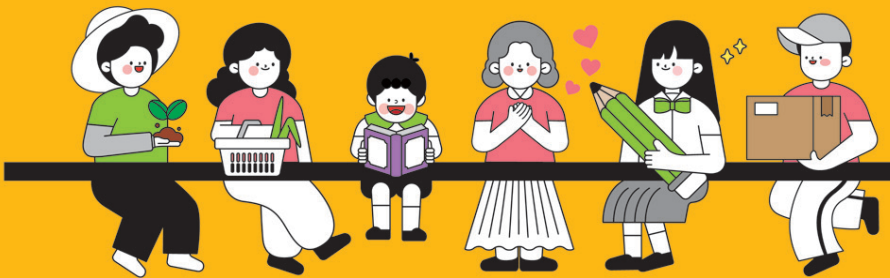
전북자치도는 이날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참여기관의 제안을 실무협의회 및 산업별 분과에서 구체화해 실제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함께 가자 완주



전주

혜택은 커지고 기회는 더!